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연내 출범 속도낸다

추진기획단 현판식·구체적 실행전략 수립 등 다짐

시·도·의회, 12명 파견...시청에 합동집무실 마련

李 정부 '5극3특' 국정과제 연계 자치분권 모델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광주·전남 특별지 방자치단체' 설립 준비가 본격화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8일 광주시청 1층 행복회의실 앞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기획단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8월 27일 양 시·도가 특별자치제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설립을 공식 선언한 이후 공동으로 구성한 추진기획단의 출범을 대외에 알리면서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고광안 광주시 행정부시장,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서용규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복회의실 앞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기획단' 현판을 걸고, 320만 시·도민 상생·공존을 위한 광주·전남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추진기획단은 향후 일정과 준비계획을 공유하고, 연내 특별광역연합 출범이

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도 다짐했다. 추진기획단은 1단 1과 2팀으로 구성되며 광주시 5명, 전남도 5명, 시·도의회 각 1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오는 11월께 합동추진단으로 확대·개편,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실질적인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추진기획단 출범은 양 시·도가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이어온 결과로,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과 연계된 자치분권 기반 협력모델로, 청년 일자리, 광역교통, 정주환경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단순한 행정협력이 아니라 산업·교통·문화 전반에서 미래산업을 키우고, 광역교통망 확장으로 접근성을 높이며 문화·관광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두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협력모델로 발전할 것이며,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맞물려 광주·전남이 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호남의 미래와 새 정부의 5극3특 전략을 선도하는 중요한 첫 걸음으로 성공적 출범을 통해 320만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호남의 힘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3대 특검 중합 대응특위 전체 회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3대 특검 중합 대응특위 총괄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특검 대응특위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후

한·중·일 배터리 전문가들

광주서 신기술 교류·협력

전기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 접합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시는 8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2025 한태평양 EV 배터리 접합기술 국제포럼'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한융접합공업협회가 주관하고 광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으며 일본·중국 주요 대학과 연구소, 국내 배터리기업 관계자 등 3개국 연구기관·기업 약 100명이 참석해 산학연 협력과 국제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뿌리산업 협의회를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86억원을 투입해 '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사업의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광주시는 'EV 배터리 접합기술 실증기반 구축사업'의 하나로, 평등 트라이아웃 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올해 말까지 'EV 배터리 접합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또 첨단장비 구축, 기업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병행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EV 배터리 접합기술 최신 연구 동향, 산업 적용 과제와 전망, 글로벌 공동연구 및 상용화 전략 등이 집중 논의됐다. 또 일본 오사카대학교, 중국 상하이교통대학교 등 해외 석학과 국내 연구기관, 삼성SDI, IPG포토닉스코리아 등 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활발하게 토론했다.

방한서 대한융접합공업협회 회장은 "EV 배터리 접합기술은 전기차 안전성과 신뢰성을 결정짓는 핵심 분야"라며 "이번 포럼이 한·중·일 전문가들이 기술과 산업의 미래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과 국가 차원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 공동연구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김영록 지사, 향토문화 보존·계승 문화원 가족 격려

장흥 문화인 한마음 어울마당...공연 등 소통·화합의 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열린 '장흥 문화인 한마음 어울마당'에 참석해 향토문화 보존과 계승에 힘쓰는 문화원 가족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장흥군과 장흥문화원이 주관했으며,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장, 김봉수 전남문화원연합회장, 김명환 장흥문화원장을 비롯한 15개 시·군 문화원장과 장흥문화원 가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읍·면 지회별 노래자

랑과 가수 김범룡, 테너 이경호 등 초청 가수 공연이 펼쳐져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김영록 지사는 "장흥은 정곡인, 이청준, 한승원, 한강 등 걸출한 문화인을 배출한 문명의 고장이자, 세계적인 작가가 나올 수 있었던 문화적 토대를 가진 자랑스러운 땅이다"며 "장흥문화원이 앞으로도 지역 문화의 허브로서 보석 같은 향토 역사·문화를 발굴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의 씨앗을 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 "국립장흥호국원, 전남도기록원을 조속히 완공하고, 장흥 천관산 도립공원 H·U·G벨트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문화원 도지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향토문화학술대회, 세시풍속 및 마을문화 지원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 문화원의 역사문화자원 발굴과 교육사업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광역·시·군 문화원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향토문화 연구와 역사문화자원 발굴 모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장흥=정명수 기자 holbul@

광주시, 전국 첫 '건설 원자재 생산공장 기동반' 도입

레미콘·아스콘 부실공사 차단
시범 운영 후 내년 상시 가동

광주시는 건설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레미콘·아스콘 생산공장 기동반'을 도입,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부실한 원자재 품질관리를 인한 시민안전 위험을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품질관리 미비,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으로 건축물의 설계수명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품질관리 사각지대에서 빈번히 발생해 왔다.

광주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품질관리의 출발점인 원자재 생산공장 점검을 위한 기동반을 구성, 지난 8월 첫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기동반은 광주시 중합건설본부 공사현장과 계약 납품 생산 중인 25개소(레미콘 16개소, 아스콘 9개소) 중 7개소(레미콘



광주시는 건설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레미콘·아스콘 생산공장 기동반'을 도입,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5개소, 아스콘 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민관합동 시범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단은 관계 공무원과 품질혁신기획단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생산시설 운영, 품질관리 실태, 원자재 반입기록, 승인받장 점검을 위한 기동반을 구성, 지난 8월 첫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범 점검 결과, 생산운영 전반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

부 골재 야적장 배수시설과 외부 저장시설 관리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광주시는 나머지 18개소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흡한 부분은 상시 기동반 운영을 통해 개선 이행 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합동 점검을 계기로 2026년 부터 '원자재 생산공장 기동반'을 연중 상시 가동해 건설자재와 현장의 품질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李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국민통합 가장 큰 책무 야당 의견 많이 듣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며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발언한 장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겠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장 대표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그냥 듣기 좋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다만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척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표는 “특검 수사가 현재 진행되는데 민주당에서 CCTV를 열람하는 인권 침해적 활동을 한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며 무리한 야당탄압과 끝없는 내란 물의에 대해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특검 기간 연장,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사법 파괴’ 시도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했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민주당 등 여권이 주도하는 검찰 해체 시도와 관련해 “수사

장동혁 “정치보복 수사 끊어 낼 책임자는 이 대통령”
정청래 “내란·외환 무관용...계엄 책임세력 사과를”

지, 특정한 이익을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여야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며 공동 공약을 이행하게 같이 시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다투며 경쟁하되, 우리 국민 혹은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며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루기)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돌아봤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이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되는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책임자는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

체계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야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며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회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히 처벌하고 처벌의 역사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은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국민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의 선전국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더욱 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 종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적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